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양도세 확정신고...코로나 피해업종, 신청 통해 3개월까지 납부연장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국외주식 양도자에게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기준이 변경돼 확정 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가 된 사람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변경된 기준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연계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비트코인 채굴, 양도·대여 시 20% 과세...전 기세는 경비처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가상화폐를 취급할 경우 모든 가상화폐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총수입에서 경비는 제외한다.

경비 가운데 자산 취득 가격과 거래 수수료 등이다.

채굴 시 사용하는 전기료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채굴기가 얼마의 전기를 썼고 이에 따른 요금을 얼마 냈는지는 채굴자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해당 증빙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과세당국은 한전도 아니거나와 한전이어도 특정 기계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미리 알아서 구분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관세청, "매출 20% 이상 감소했으면 관세조사 유예해준다"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부터 유예 희망기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